

충남리포트 제71호 2012. 09. 20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

윤정미(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coco@cdi.re.kr)

목 차

< 요 약 >

1. 서론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개념 및 내용
3.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추진현황
4.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방안
5. 결론

〈요 약〉

-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뭄·홍수 등 극한 기상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기상이변 및 집중호우 증가로 풍수해 피해 급증
- 최근 20년간 전국 풍수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은 1조 555억원, 침수 면적 7만 9천ha이며, 재난발생으로 인해 산사태, 침수, 토석류발생 증가에 따른 2차 피해가 가중되는 등 융·복합 재난 형태로 발전
- 재해유형이 다양화·대형화되어 가고, 재해발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증가(재산피해차원이 아닌 인명피해 심각)
- 이러한 현 상황에서 정부는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였음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태풍, 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재해위험요인을 찾아내는 저감대책 수립 계획임
-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지자체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충남의 경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의 6개 지자체가 승인되었으며,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이 소방방재청에 승인 신청 중이며, 당진시, 금산군, 서천군, 태안군이 계획 수립 중으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공간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계획과 접목되어야 함
- 이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과의 유기적 연계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현 단계에서 이를 점검해볼 수 있음

- 첫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분석 단계부터 도시계획적 측면을 고려하여 조사, 분석, 선정,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 둘째, 계획수립 시 결정된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단계별,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셋째, 위험지구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도시계획과 관련성을 파악하여야 함
- 넷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사항 중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 계획 등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다섯째,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이 상호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연계되어야 함
- 여섯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방재시설 중심의 구조적 대책 위주 수립에서 벗어나 도시계획적 규제와 유도를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함

1. 서론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태풍, 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재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계획임
- 이 계획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지자체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공간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계획과 접목되어야 함
- 즉,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도출된 풍수해위험지구와 관련하여 개발 입지를 유도하고 토지이용을 배분하는 등 도시 계획적 대책과 연계가 필수적이나 현재 방재시설 중심의 구조적 대책 위주로 수립되고 있어 도시계획 규제와 유도를 내용으로 하는 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2012년 8월 기존 수립기준에서 미비하였던 도시계획과의 연계 방법을 보완하여 계획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재해위험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도시계획 반영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강화
 - 도시계획수립 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반영,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 취약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요건 강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인센티브 제공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조치와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 이에 본 내용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과의 연계방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함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개념 및 내용

1)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개념

- “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함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지역별로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각 지자체장이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해당 지역의 풍수해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추진 사항

- 재해복구개념에서 예방위주의 방재형 국토체질 강화를 위해 2005년 7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제도 도입
- 2012년 1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시 도시계획 반영을 의무화하기 위해 국토법 시행령 개정
- 2012년 8월 기초단위와 광역단위 계획 수립 시 동일한 세부수립기준이 적용된 한계 극복 및 도시계획과의 연계 강화 등을 위해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제·개정하였음
- 개정된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은 도시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기초조사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정된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2개 이상 시·군과 연계된 지역에 대한 위험지구

및 저감대책 조정, 풍수해 여건변화로 인한 시·군 계획 변경·보완, 시·군별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이 주요내용임

< 2012년 1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내용 >

- 첫째, 도시계획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반영 명문화
 - 각종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 의무화
- 둘째, 재해취약지역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요건 강화
 - 현재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고 있는데, 방재지구, 풍수해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에서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여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서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 국토해양부, 2011.10.28 보도자료

3)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및 주요 내용

-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며,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에서 통합 수립함
- 풍수해에 대한 기초조사 및 분석을 통해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풍수해 위험지구를 선정한 후,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비와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자체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함

- 기초조사는 행정, 인문, 자연, 방재현황에 관한 일반현황 조사와 풍수해 현황조사(연도별 주요 풍수해현황, 방재관련계획, 토지이용관련계획, 시설정비 관련계획, 국가단위관련계획 등)로 구분하여 실시함
- 이러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풍수해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위험지구는 재해 유형을 하천, 내수, 사면, 토사, 해안, 바람, 기타로 구분하여 우선 후보지를 도출하고 후보지를 대상으로 최종 위험지구를 선정
- 선정된 위험지구에 대해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을 수립하며, 저감대책은 전지역과 수계·위험지구 단위로 수립하고, 저감대책 수립 시 타 분야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 마지막으로 종합대책 시행을 위한 투자우선순위 등을 수립

<표 1>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시행령 제13조)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유역 현황, 하천 현황, 기상 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재해 발생 현황 및 재해 위험 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3. 풍수해 재해복구사업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주요 시설별 풍수해 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의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6. 풍수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7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 주요 내용	1. 기초현황 조사(자료조사, 설문조사) 2. 풍수해위험지구 선정(재해유형별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재해유형별 위험지구 현장조사, 풍수해 위험요인 분석, 풍수해위험지구 선정) 3. 풍수해저감대책 수립(전 지역단위 저감대책, 수계단위 저감대책, 위험 지구단위 저감대책, 타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4. 풍수해저감대책 시행계획(투자우선순위 결정, 재원확보계획, 단계별,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도 작성,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3.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추진현황

- 계획수립 현황을 살펴보면 153개 지자체 중 77개(승인 36건, 진행중 41건)가 수립되었으며, 75개 지자체가 용역 진행 중이고, 1개가 미발주되어 있음
 -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는 2012년 8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광역차원으로 계획이 통합·추진되어져 불필요한 지역이기에 수립현황에서 제외하였음
- 충남의 경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의 6개 지자체가 승인되었으며,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이 소방방재청에 승인 신청 중이며, 당진시, 금산군, 서천군, 태안군이 계획 수립 중으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추진되고 있음
- 충북이 8건 승인, 4건 진행 중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충남은 6건 승인, 5건 진행 중, 4건 용역 중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계획 수립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

<표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추진현황(2012. 8. 23기준)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수립 현황	대상 시·군·구	153	31	18	12	15	14	22	23	18	-	-
	승인	36	10	5	8	6	1	1	2	3	-	-
	진행중	41	9	8	4	5	6	-	6	3	-	-
용역 중		75	12	5	-	4	7	21	15	11	-	-
미 발주		1	-	-	-	-	-	-	-	1	-	-

자료 : 소방방재청, 2012, 내부자료

※ 주1. “승인”은 확정 통보된 경우, “진행 중”은 승인 신청된 경우

<표 3> 세부 수립추진현황

구분	대상	수립현황				용역 추진 중		미 추진	
계	153	36	승인	41	진행 중	75		1	
경기	31	10	성남, 부천, 광주, 평택, 파주, 안양, 오산, 남양주, 용인, 광명	9	수원, 화성, 군포, 하남, 고양, 의정부, 연천, 여주, 의왕	12	안산, 시흥, 김포, 이천, 안성, 양평, 과천,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0	
강원	18	5	영월, 정선, 원주, 평창, 홍천	8	춘천, 동해, 태백, 양구, 인제, 철원, 속초, 강릉	5	삼척, 횡성, 화천, 고성, 양양	0	
충북	12	8	증평, 괴산, 청주, 진천, 보은, 음성, 단양, 청원	4	충주, 옥천, 영동, 제천	0		0	
충남	15	6	천안, 공주, 보령, 계룡, 아산, 서산	5	논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4	당진, 금산, 서천, 태안	0	
전북	14	1	장수	6	익산, 김제, 임실, 군산, 무주, 정읍	7	전주, 남원, 완주, 진안, 고창, 순창, 부안	0	
전남	22	1	고흥	0		21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화순, 보성, 장흥,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강진	0	
경북	23	2	영양, 청송	6	포항, 영덕, 예천, 봉화, 청도, 울릉	15	경주,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고령, 칠곡, 울진, 김천, 구미, 성주	0	
경남	18	3	남해, 의령, 거창	3	창녕, 양산, 고성	11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함안, 하동, 함양, 함천	1	산청군 ("12.8월)
제주	-	-	-	-	-	-	-	-	
세종	-	-	-	-	-	-	-	-	

자료 : 소방방재청, 2012, 내부자료

4.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방안

- 기존 도시계획 수립시 방재 계획이 부문계획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도시계획상의 방재계획은 위험도 조사에 근거한 계획수립이 전무한 실정임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풍수해 위험을 고려하여 개발입지를 유도하고 토지이용을 배분하는 등 계획의 실효성 측면에서 도시계획적 대책과의 연계가 필수적임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기준상에서는 풍수해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도시계획상 개발용도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해당지역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알려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음
-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체계 상의 계획수단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분석 단계부터 도시계획적 측면을 고려하여 조사, 분석, 선정,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 풍수해위험지구 선정 시 장래의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하여 위험요인을 분석하여야 하며, 저감대책 수립 시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 둘째, 계획수립 시 결정된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단계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표 4>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 측면의 고려사항

구 분	내 용
기초조사분석단계	도시기본계획상 장래 토지이용계획 변화 예측을 전제로 한 재해위험지구 분석 개발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풍수해 영향예측 및 분석
풍수해위험지구 선정	토지이용계획 내용에 따라 방재성능목표 설정 및 위험등급 차별화 도시계획연계를 위한 위험분석 및 등급별 공간적 범위 설정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수립	시기화지역내 저감대책을 토지이용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시설계획 등 관련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도시계획 및 관련계획의 사업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지구별 저감대책 수립

자료 : 윤중경, 2011, 효율적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도시계획 연계방안, 소방방재청 워크숍 발표자료, p.134

- 셋째, 위험지구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도시계획과 관련성을 파악하여야 함
 - 면 형태(polygon type)의 구역도로 명기하여 위험지구와 저감대책을 시행할 구역과 각종 개발사업 구역간의 상충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위험구역내의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시행할 구역을 파악하고 도시개발에 있어서의 재난 해소를 위한 행정적·유도적 차원의 제언을 할 수 있도록 함
- 넷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사항 중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 계획 등에 반영해야 할 사항 제시
 - 예를 들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저감대책에 저류시설대책이 있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는 경우, 저류시설대책을 도시개발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조치
 - 또한 풍수해위험지구와 장래 택지개발사업지구가 겹치는 경우, 풍수해저감을 위해 해당 택지개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도록 조치

- 풍수해위험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적 저감대책으로서 세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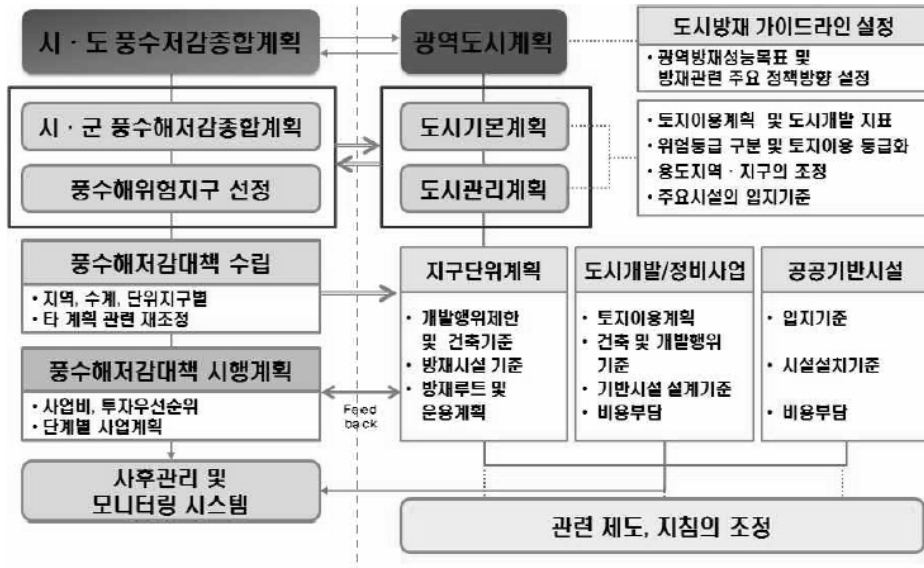
풍수해위험지구 선정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저감대책으로서 가능한 대안	
기개발지역 (주거, 상업업무, 공업 등)	기개발지역 이외의 미개발/저개발지역 (녹지, 농경지, 자연환경보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대책 및 대체토지 마련 - 방재지구 지정 및 정비/규제(지자체 조례) - 일반 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거환경정비, 도시환경정비 등 - 개별 건축규제: 대지(예:지반고 승고), 건축용도(예:지하층 거실용도 불허), 구조(예:필로티, 풍수해에 안전한 구조/재료), 설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개발 억제 - 신규개발 허용하되, 풍수해 저감대책 조건부 허용 -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상 시기회예정 용지에서 제외하고 보전용지로 배분 -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상 보전용도지역 지정, 보전 녹지, 보전관리, 자연환경보전 등 - 개별 건축규제: 대지(예:지반고 승고), 건축용도(예: 지하층 건실용도 불허), 구조(예: 필로티, 풍수해에 안전한 구조/재료), 설비 등 - 토지매입

<그림 1>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저감대책(예시)

자료: 소방방재청,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p.47

- 다섯째,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이 상호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연계되어야 함
 - 풍수해저감대책 수립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정비사업, 공공기반시설을 연계하고 풍수해저감시행계획과 도시계획이 상호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관련제도 및 지침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¹⁾

1) 이창수 외, 2011, 도시계획 수립 시 풍수해저감을 위한 매뉴얼 개발, 국립방재연구원, p.114



[그림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 연계의 기본 구조

자료 : 이창수 외, 2011, 도시계획 수립 시 풍수해저감을 위한 매뉴얼 개발, 국립방재연구원, p.114

- 여섯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방재시설 중심의 구조적 대책 위주 수립에서 벗어나 도시계획 규제와 유도를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수립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가 계획 수립 시 참여하여야 함

5. 결론

-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뭄·홍수 등 극한 기상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기상이변 및 집중호우 증가로 풍수해 피해 급증
- 최근 20년간 전국 풍수해 연평균 피해액은 1조 555억원, 침수면적 7만 9천ha이며, 재난발생으로 인해 산사태, 침수, 토석류발생 증가에 따른 2차 피해가 가중되는 등 융·복합 재난 형태로 발전²⁾
- 재해유형이 다양화·대형화되어지며, 재해발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증가 (재산피해차원이 아닌 인명피해 심각)
- 이러한 현 상황에서 정부는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 수립·추진
- 특히 방재시설 중심의 구조적 대책 위주 수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과의 연계방법을 보완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이에 개발입지를 유도하고 토지이용을 배분하는 등 도시계획 대책과 연계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함
- 충청남도 시·군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현황을 살펴보면 6건 승인, 5건 심의 중, 4건 용역 중으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수립되고 있으며, 풍수해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에서 제시한 도시계획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며, 특히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부터 완료까지 도시계획과의 피드백이 원활이 이루어져야 함

2) 류지협, 2011, 효율적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도시계획 연계방안, 소방방재청 워크숍 발표자료, p.164

- 계획수립 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해당과만이 아닌 타 부서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계획이 수립되어야 계획의 완료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 이를 위해 계획수립 시 도시계획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문가, 공무원, 주민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여야 함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활용제고를 위해 계획의 결과물인 풍수해위험지구 등을 충청남도 3차원 GIS 시스템 상에 탑재함으로써 개발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시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국토해양부,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재해위험을 고려한다, 2011.10.28 보도자료
소방방재청,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연구
소방방재청, 201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워크숍 발표자료
소방방재청,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제·개정 고시, 2012.8.23, 보도자료
윤중경, 2011, 효율적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도시계획 연계방안, 소방방재청 워크숍 발표자료, p.134
이창수, 2011, 도시계획 수립시 풍수해저감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방재연구원

윤 정 미 coco@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Tel. 041-840-1203

* 본 내용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과 도시계획 수립시 풍수해저감을 위한 매뉴얼 개발 연구 결과, 소방방재청 보도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둡니다.

충남리포트 발간리스트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08-01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유출 사고와 지역발전 전략	송두범	2008. 1.21
2008-02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향후 발전 과제	강영주	2008. 2.22
2008-03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이충훈 · 권영현	2008. 3.19
2008-04	국가적 도시재생연구 추진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조봉운 · 송두범	2008. 5. 2
2008-0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내용 및 성공적 구축과제	송두범 · 강영주	2008. 5.27
2008-06	방위산업의 현황과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이관률	2008. 6.19
2008-07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신동호 · 강영주	2008. 7.30
2008-08	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분석	백운성	2008. 8.29
2008-09	충남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시·군별 균형발전 평가	원종문 · 강영주	2008. 9.30
2008-10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발표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	백운성	2008.10.30
2008-1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분석	오용준	2008.11.28
2008-12	생물다양성 국내외 현황 및 확보 방안	정옥식	2008.12.30
2009-01	충남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부품소재 전문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강영주	2009. 1.30
2009-02	충청남도의 금강 살리기 연계 발전전략	한상욱	2009. 2.24
2009-03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정종관	2009. 3.11
2009-04	비람직한 금강 하구역 개선을 위한 부분 해수유통 방안	전승수 · 한상욱	2009. 3.18
2009-05	굴포운하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활용방안	오석민 · 한상욱	2009. 4.24
2009-06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지역파급효과와 발전전략	이인배	2009. 5. 8
2009-07	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임준홍	2009. 6.29
2009-08	태안군 녹색성장이 육성을 위한 환경생태관광의 여건과 발전전략	이인배	2009. 7.23
2009-09	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	최인호	2009. 8. 6
2009-10	로컬푸드의 실태 및 충남의 실천과제	윤병선 · 유학열	2009. 9. 7
2009-11	충남 전통시장의 특성과 활성화 전략	임준홍 · 이상준외	2009. 9.30
2009-12	지역 통계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	조한석 · 백운성	2009.10.30
2009-13	충남 농수산물 수출실태와 활성화 전략	임형빈 · 유학열	2009.11. 9
2009-1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반드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김용웅	2009.11.18
2009-15	충남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재완 · 이관률	2009.12.11
2009-16	대전 · 충남의 금융산업과 지역발전	류덕위 · 김양중	2009.12.31
2010-01	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응한 충남의 도시재생 전략	임준홍 · 조수희외	2010. 1.29
2010-02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 · 김양중	2010. 2.24
2010-03	충남의 지역경제 개관 -사회계정행렬(SAM)을 통한 분석	임재영	2010. 3.10
2010-04	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전략 II	이용재 · 임준홍	2010. 3.18
2010-05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II	이충훈 · 권영현	2010. 4. 5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0-06	아·태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충남의 정책적 시사점	최병학	2010. 4.30
2010-07	중국 시장에 대한 충남의 수출경쟁력 분석	김양중	2010. 5.10
2010-08	충남 도시농촌 교류정책의 현황 및 과제	송두범	2010. 5.27
2010-09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김양중	2010. 6. 3
2010-10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충남 연안역에 미치는 영향	장동호·윤정미	2010. 6.21
2010-11	충남 귀농·귀촌 실태 분석과 과제	유학열	2010. 8. 9
2010-12	충남경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신동호	2010. 8.16
2010-13	충남 지역경제 10년과 과제(1998년-2007년)	임재영	2010. 8.19
2010-14	기후변화의 영향과 충남의 대응정책	이인희	2010.10. 6
2010-15	사람중심, 행복한 도시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	조명래·임준홍외	2010.10.29
2010-16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임준홍·김양중외	2010.11.09
2010-17	충청광역경제권의 산업간 연계구조 분석	임형빈	2010.11.16
2010-18	충남의 저탄소 녹색도시정책과 과제	오용준	2010.12.30
2011-01	경관법 개정에 따른 충남도 및 시·군의 대응방안	한상욱	2011.01.13
2011-02	2011년 충남의 GRDP 전망	김양중·이선호	2011.02.10
2011-03	고령화시대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이충훈	2011.03.31
2011-04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우선보전 연결구간 선정	사공정희	2011.04.21
2011-05	상권활성화제도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	임준홍 외3명	2011.05.02
2011-06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이상진·김영일	2011.06.23
2011-07	민선 5기 충남도정 1년을 말한다	성태규외	2011.06.30
2011-08	충남 항만 이용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1.07.11
2011-09	박쥐 복원의 필요성과 방안	정옥식	2011.07.27
2011-10	충청남도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	성태규	2011.08.22
2011-11	기업과 지역주민 간 상생·협력 방안 연구	김양중	2011.10.31
2011-12	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과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안	홍성호	2011.11.30
2011-13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정책과 대응방안	이인희	2011.12.29
2012-01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김종수	2012.01.31
2012-02	국내외 농공상 융합기업 지원정책 동향과 시사점	신동호	2012.02.13
2012-03	2012년 충남의 수출입 전망	김양중	2012.02.28
2012-04	2012년 충남 GRDP 전망	김양중	2012.02.28
2012-05	충남 가구 주택 특성과 정책방향	임형빈	2012.03.12
2012-06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과 협동조합	송두범·김종수	2012.04.02
2012-07	충청남도 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김영일	2012.05.31
2012-08	충청남도 전원주거단지 정주실태 분석	조영재	2012.06.21
2012-0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충남의 특화산업 분석과 선정	전영노·백운성외	2012.08.10
2012-10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	허남혁·정준	2012.08.16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